

## 大學教授會議의 活性化 문제

金 鎮 洪  
(韓國外國語大 弘報學科)

대학이 대학 밖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회의만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그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수회의는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대학문화의 생산을 모색하는 진정한 대학공동체적 장치가 될 것이다.

### I

올 2학기를 전후하여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은 이른바 ‘學園對策’의 주요 항목의 하나로 ‘대학 교수회의 활성화 방안’이 들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모저모 검토하여 그야말로苦心 끝에 내린 방안일 터이지만 이 방안이 어떻게 ‘대책’으로 채택되었나 싶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여당 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대학 안팎에서 소요와 진통이 일 때에는 으레 대학 교수회의를 자주 열어 학원문제를 스스로 대처해 나가라는 뜻이지 싶다. 알맹이 없는 교수회의를 자주 열어 무엇하랴 싶는데 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모양이다. 켄스케 실속 없는 교수회의를 자주 열면 교수회의의 체통만 실추되고 교수들의 권위도 덩달아 떨어질 것만 같은데 당국에서는 무언가 實益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어찌 보면 이 방안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야 그렇게 반갑고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항목이다. 교수의 입장에서든 그럴 수 있는데

교수의 입장이 아닌 대학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現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대학에 몸 담고 있는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교수들에게 肉化된 비관적 思考行爲로 해서 자연스럽기 그 항목의 背面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사정이 아닐까 싶다.

언제부터인가 대학 교수들은 싸르트르가 말하는 이른바 ‘狀況의 倫理’에 잘도 적응해 왔던 게 사실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 비대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의 대학의 구성원인 대학 교수들은 상아탑에만 안주하지 못하고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현실 문제에 順應 내지 同調하여 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강요당한 듯 싶은 沈默 속에서 순응해 왔거나 동조해 왔던 것이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애써 발언하려 들지 않아 왔고 쟁점화되고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외면하기 일쑤였지 않나 싶다. 최근에 모일간지가 “이제 대학이 말할 차례다”라는 題下의 사실을 통해 대학의 異常沈默

을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대학 교수의 현실적인 실상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강단에 서서도 그들은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도 대학 교수들은 짐짓 자유인으로서 한껏 고뇌하는 지성의 표정을 짓곤 했던 것이다. 私朋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때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을 강의실에서는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二律背反性的 倫理方式을 견지하는 데 익숙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부분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에세이 토론하러 들지 않는 입장에 교수들은 서곤 했다. 토론 없는 시대에 왜 굳이 토론하러 드느냐는 자세로 말이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의 윤리에 순치된 교수들은 사회와 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 무표정한 동조의 눈길로 응시할 뿐이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觀察인지는 몰라도 대학 교수들은 지성의 꽃대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이 같은 순치된 눈길로 이 '교수회의 활성화 방안'을 보던 역시 오늘의 상황에서 의당 그래야겠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II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대학 교수회의 활성화'란 개념은 그 자체로서 가치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처음부터 額面價와 背面價를 함께 지니고 있는 두리몽실한 용어가 아닐까 싶다. 차라리 '교수회의의 민주화 방안'이라든지 '교수회의의 학원대체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평교수협회의 부활 방안'이라든지 하여 이 항목의 개념을 단순화시켰더라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自由와 自律을 표방하는 대학에서 가장 신성시 되어 온 대학 교수회의가 '학원대체'의 秘策인 양, 妙方인 양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회의의 활성화' 개념은 額面·背面의 가치의 혼돈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진다. 좋게 보아 秘策이요 카드化지 용어를 바꾸어 보면 秘密兵器化와 방패막이化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껏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이렇다 할 매뉴얼(manuals)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활성화의 요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형

편에서는 개념가치의 혼돈은 더욱 심화될 것만 같다. 여기에서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 방안의 再概念化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너우기 정부권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 방안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도에 따라, 그 의도의 성취를 통해 학원의 외형적 안정을 이룩해 보겠다는 發想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진다. 지금껏 그 엄청난 걸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학의 권위를 지켜 왔고 또 여전히 지켜 가야 할 대학의 상징적 존재인 대학 교수회의마저 정치적으로 체색되어 회색화될 때 대학의 권위는 자기 파괴의 길을 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鎮靜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대학내의 문제는 더욱 심화·확산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에서 저우기 우려되는 것이다.

대학이 본래적으로 누려 온 권위는 자유로운 가운데 스스로 지켜가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대학의 자율적 권위의 회복은 정치적 개입의 차단을 의미한다. 자율적·自生的 토양 위에서 구축된 대학의 권위가 他律에 의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용해될 때 대학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때 대학의 自主能力을 상실하여 대학 스스로의 방향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덧붙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政治言語로서의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 정치언어에 오염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한 가지 예로 '대학자율화'만 해도 그렇다. 것처럼 순수한 언어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개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는가. 대학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양식을 걸고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半自律化' 내지 '擬似自律化'로 여길 수밖에 없는 大學自律處方의 개념이 담긴 이 '自律化'란 용어를 정치적 언어로 변질시키는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이 같은 정치언어로 홍보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對抗弘報'

는 어차피 그 정치성으로 해서 설득력을 잃고 대학홍보의 標的受容者(target audience)인 학생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배척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하나의 메시지가, 그것이 정치적이든 非政治的이든간에 수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選擇幅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 메시지가 수용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궁색한 논리로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 표적수용자로서의 대학인들을 說服시키려 노력해 온 것이 작금의 사정이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 대학이 얻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떤가.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입을 상처가 컸다는, 그림으로써 그 상처가 너무나 커질 것이라는 공통적 인식의 결과를 대변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의 말을 경청하려 들지 않고 대학 교수와의 대화를 기피하려 들며 심지어 교수의 말마저 믿지 않으려 드는 것도 이 같은 결과의 편린이 아니겠는가도 싶다.

이 같은 저간의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당국이 생각하는 정치적 언어와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사이에는 비록 같은 보편성을 띤 언어나 하더라도 시각에 따라서는 실로 엄청난 言語偏差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언어화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간에 대학 스스로가 그 방안을 놓고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학이 대학 스스로의 순수성을 지켜 가면서 협의 과정을 거쳐 ‘대학의 언어’로 토론될 때만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대학은 대학인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학사회의 위축된 분위기 아래서는 활성화는 이룩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란 항목도 역시 대학의 언어로 말해져야 한다.

여기서 굳이 대학 교수회의의 활성화 문제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교수회의에서 대학의 발전과 대학의 장래를 활발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을 어느 누가 탓할까마는 대학 교수회의가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은 거세당하고 교착 학

내소요나 학원사태의 응급처방전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모이는 것이 활성화로 인식되는 오늘의 풍토가 걱정스러워 하는 말이다.

### III

대학의 학내외의 소요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대학 교수회의의 運用이 새삼스럽게 문제시되고 있는 터이다. 그것은, 대학 교수회의에서 의당 토론되어야 할 대학의 발전 문제와 대학문화의 質的高揚 문제들은 뒷전에 미루어진 채 학생소요에 따른 학교 당국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학 교수회의의 自畫像이 한결같이 이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가 어차피 지나는 ‘긴급성’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反大學的·反知性的 대학 풍토에 의해 대학의 명제인 대학 자율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대학이 진통을 겪게 됨에 따라 최근에는 교수회의가 定例化되다시피 자주 열리고 있다. 이 긴급교수회의에서 마련할 수 있는 處方箋이라야 별다른 妙方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대학 교수회의가 이제는 ‘다지막 카드化’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어 대학의 變轉을 실감케 한다. 대학 교수회의의 이와 같은 擬似活性化 현상은 이른바 대학의 他律的 自律化가 낳은 異例的 局面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 이르러 대학 교수회의가 이치될 이례적으로 비치는 것은 實定法이나 大學學則에 明文化되어 있지 않은, 實體化된 조직도 아니면서 대학의 상징적 자문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수회의가 그 본래의 특성을 잃고 타율적으로 脫色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나 보여진다.

따라서 대학 교수들이 오늘날과 같은 여건에서 영교수협의회의 구성이 어의치 않은 만큼 대학 교수회의의 진정한 활성화와 민주화 그리고 非他律化를 통해 대학 교수회의의 脫色化를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런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교수들은 또 대학 교수회의가 기껏 대학소요의 대책을 협의하느라 腐心하는 기구로 전락되고 있

는 오늘의 현실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는 民主的 協議體로서 實勢化시킬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대학 교수회의야말로 대학 교수가 다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대학 공동체적 장치이길 교수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또한 교수회의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와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정부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학 교수회의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의를 필자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교수회의는 무엇보다도 자유와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토론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때 의견의 획일화와 水路化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롭고 자율적인 토론의 분위기가 성숙되는 곳에서는 협의를 통한 건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이 같은 대학내의 여론 형성을 바탕으로 할 때 학내외의 현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이 풀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교수 개개인의 의견 제시와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합리적인 결정 사항은 대학의 理性에 의해 수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 교수회의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내의 意見通路를 통해 자유롭고 건전한 여론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수회의의 민주화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렇게 될 때에만 특정 문제에 대해 독립된 의견이 손쉽게 제기될 수 있고 이들 서로 다른 견해가 활발한 토의 과정을 거쳐 대학 전체의 의견으로 여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내에서는 그 어느 집단보다 쌍방적인 토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肥大化와 專門化로 말미암아 토론의 기회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토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립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동일한 의견만이 제기될 때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의견의 합일’

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교수회의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못하게 되면 침묵이야말로 黃金이라는 陰性的 분위기가 팽배되어 要式的 節次로 전락될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다.

세째, 앞서 서론 부분에서 강조하여 예기했듯이 적어도 대학 교수회의만은 정치적 오염 수준을 최소화해야 하겠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하겠다. 대학 교수회의마저 정치적 의도에 따라 他律的으로 조정되거나 조작되는 경우 바로 그 他律性和 政治性에 의해 지금껏 最高善으로 신성시 되어 온 대학의 권위가 붕괴되어 대학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대학이 대학 밖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대학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교수회의만은 정치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수회의의 다이내믹스는 생명력을 견지하게 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과 대학문화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 대학 교수회의는 전혀 私的인 場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디까지나 公的인 場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들고자 한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일 듯도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교수회의가 公的 場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私的인 場이라 함은 대학당국이 상부 또는 외부의 영향력을 내세워 교수회의를 一方通行的·指示的 場으로 끌고 가는 것을 뜻한다. 대학 자체에 관계되는 公的 關心이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대학당국과 전체 교수 사이에 水平的 意思交換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즉 公的인 場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대학 교수회의는 본래의 특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대학 교수회의가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는 민주적 협의체로서 實勢化하여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기껏 대학소요의 대책을 강구하는 기구가 아닌, 대학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대학문화의 생산을 모색하는 진정한 대학 공동체적 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